

‘추경 시정연설’ 내일 국회 본회의… 27일 예결위원장 선출

우원식 의장·원내대표 회동…상임위원장 재배분 등 논의
윤리특위 구성·항공참사 특위 활동 기한 연장 등도 요청

국회는 26일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등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상임위원장 재배분, 본회의 일정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26일 본회의가 열린다며 “(본회의에서) 추경 시정연설과 찰스 랭글 전 연방 하원의원 추모결의안을 채택하는 것만 진행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원내대변인도 기자들에게 “26일 본회의의 일정을 합의했느냐”라는 물음에 “일단은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우 의장은 비공개 회동에서 추경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명단을 26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양당 원내대표에게 요청했다고 김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또 법사위원장 등 공석 상임위원장(5곳) 문제의 여야 협의, 윤리특위 구성, 6월 말로 끝나는 항공참사 특위 활동 기한 연장 등도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요청했다.

이날 회동은 여야 원내대표가 최근 새로 선출됨에 따라 우 의장과 의결위원장을 겸해 이뤄졌다.

우 의장은 비공개 회동 전 모두발언에서 “국회에 추경 예산안, 국무총리 인사 안건이 넘어와 있다”며 “여야 간 입장 차이도 있겠지만, 국민의 근심을 덜어드리고 또 국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4일 비공개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7월 4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적어도 이번 주중 예결위원장을 선출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예결위원장 표결을 위한) 27일 본회의가 예정됐다”며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선의의 경쟁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왼쪽)·박찬대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나란히 손을 잡고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에 지하철 2호선·여수산단 예산 반영”

‘호남 예산 지킴이’ 안도걸 의원 “광주·전남 재도약 이끌 기폭제 될 것”

‘호남 예산 지킴이’ 더불어민주당 안도걸(동남을) 국회의원은 24일 “정치는 민생이고, 예산은 정치의 실력”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광주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무너진 민생을 되살리고, 불 꺼져가는 지역경제에 다시 불을 밝히며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마중물이자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22대 국회의 대표적인 ‘예산통’ 정치인이며, 호남 예산 확보에도 앞장서고 있다. 그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제2차관을 역임해 이재명 정부의 철학을 실무로 구현하는 예산의 ‘핵심 엔진’으로 꼽힌다.

안 의원은 “이번 추경은 산업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 회복, 청년과 서민, 소상공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탱하기 위한 민생 중심의 전략 예산”이라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철저히 지역과 시민의 요구, 즉 ‘국민의 명령’을 반영한 결과물이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또 “정치는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 예산만큼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아는 분야”며 “AI중심도시,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등을 비롯한 광주의 미래먹거리 산업, 청년 창업 생태계, 기후 대응 도시, 문화중심도시 조성 등 중장기 전략사업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예산을 통해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추경안에 광주·전남 예산이 대거 반



영된 것에 대해서는 “광주와 전남은 그동안 예산 배정의 사각지대, 변방 취급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며 “그러나 이번 추경을 통해 광주의 도시철도 2호선, 호남고속철도 2단계 조기 완공, 여수국가산단 산업위기

대응 예산 등 지역의 오랜 숙원과 절박한 민원이 마침내 국가정책과 예산으로 반영되는 전환점을 맞았다”고 평가했다.

또 “이 사업들은 단순한 SOC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바꾸고, 지역의 미래를 다시 쓰는 동력이며 광주·전남의 재도약을 이끌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무엇보다도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지난 윤정권 시절 광주발전의 핵심적인 사업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던 사실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광주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타당성을 갖춘 정공법으로 접근했다”고 소개했다.

또 “광주 동남구는 호남정치 1번지이자, 제 정치 여정의 출발점이다”면서 “지난 33년간 공직에 몸담으며 예산과 정책의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이제는 지역과 민생,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온전히 쏟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혁신·진보당 “‘개혁법 무산’ 송미령 유임 철회해야”

1인 시위 등 반발…이 대통령 “유임된 장관, 갈등 조정 역할 필요”

이재명 정부의 첫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던 송미령 장관이 유임된 것과 관련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거세게 반발했다.

혁신당 농어민위원회 박용두 위원장은 24일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 1호 거부권’으로 상징되는 양곡관리법을 비롯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협회의소법 등 식량주권을 지키고 농업과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한 개혁 법안들을 줄줄이 무산시켰던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윤석열 농정에 대해 송 장관은 공식적으로 참회와 반성, 사과와 유감의 발언도 없었다”면서 “(정권교체에) 표를 모아준 농민들의 입장에서 ‘실용주의’를 앞세운 송 장관의 유임은 국민주권정부의 농정방향도 역대 정권의 농정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감을 안겨준

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송 장관의 유임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전 의원은 “앞에서는 국가책임 농정, 국민주권 정부를 말하고 뒤에서는 송미령 장관을 유임시키는 것은 남태령, 석수역 트랙터 농민들을 정면으로 배신한 것이고 내란 농정의 연장이자 농업·농촌·농민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 전남도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재명 정부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은 농민 배신이자, 농정 개혁 포기”라며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유임 후 첫 국무회의에 참석한 송 장관에게 “사회적인 충돌, 혹은 이해관계에 있어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유임된

장관으로서 적극적으로 들어보고 갈등을 조정하는 데에 직접 역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송 장관이) 수궁한 것으로 본다”며 “유임 결정까지는 대통령실에서 한 것이지만, 이후에 갈등 조정의 기능도 내각에 임명 혹은 내정된 분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송 장관이 유임된 배경과 관련해서는 “첫 국무회의에서 대부분 사의를 표한 후라 소극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답변이 많았던 반면, 송 장관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고 국정 방향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여러 안을 가지고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일할 수 있는, 준비된 현직 국무위원이라고 판단한 것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해 본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정위, 공수처·중수청 역할 조정 논의

국정기획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권한·기능의 확대, 향후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의 역할 조정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론까지 거론됐던 공수처에 힘을 실어주는 논의가 검찰개혁의 틀 안에서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는 전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공수처와 약 70분간 간담회를 갖고 역할 제고 방안 등을 상의했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공수처 본연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기능을 확대하고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절실하다

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우수 인력의 확보를 위해 검사·수사관의 임기제를 폐지하거나 적극심사제를 도입하는 등 인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거나, 공수처 검사·수사관에 대해서는 검찰보다 파격적인 대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 등이 나왔다.

아울러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될 경우 공수처와 수사 대상이 중복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권한과 범위를 효과적으로 조정·분배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다. /연합뉴스

한 사람의 보험비지
전 국민의 경제부담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병원 입원 알바】
고수의 보장
보험 가입 필
http://X&3@%M%T

알바 댄는데 해볼래?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STOP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